

닭 · 오리 취급업소 위생 점검



조류인플루엔자 차단을 위해 닭, 오리 등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업소에 대한 위생점검이 실시된 1월 13일 대전 동구청 경제과 직원이 가양동의 한 가공공장에서 위생상태를 점검하고 있다.

▶ 충남일보 이성희 기자 [2015. 01. 13]

무안 오리농가 고병원성 AI 확진

새해 들어 지난 1월 6일 전남지역 첫 조류인플루엔자(AI) 의심신고로 접수된 무안 일로읍 오리농가에 대해 AI 확진 판정이 나온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월 9일 전남도에 따르면,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이날 300마리의 오리가 폐사하는 등 AI 의심증상을 보인 무안 일로읍 육용오리 시료를 채취해 정밀 검사를 실시한 결과, 고병원성 H5N8형 AI에 감염된 것으로 최종 확인했다. 도는 이 같은 검사결과를 다음날인 1월 7일 오후 7시께 검역본부로부터 통보받았으나 AI확진 사실을 언론 등에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았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신고 접수 즉시 초동방역팀을 현장에 파견하고 역학조사, 출입통제·소독 등 차단방역 조치를 취했으며 예방적 살처분을 실시했다”면서 “이번의 경우 검사결과가 비교적 빠르게 나온데다 일과가 끝난 늦은 시간에 통보받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년간 전남지역에서는 총 68건 125농가에서 AI가 발생해 285만 7,000마리가 살처분됐으며 이에 따른 재산피해는 437억 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2011년에 이어 지난해와 올해까지 잇따라 AI가 발생하고 있지만 뚜렷한 감염경로가 밝혀지지 않아 축산 농가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 뉴스1 김한식 기자 [2015. 01. 09]

축산물 도축가공업체 지원 요건 강화 농축산부, 방역 평가 미흡시 자금 지원 제외 HACCP 평가등급 등 고려, 운영자금도 조정

앞으로는 가금계열화사업자의 방역 프로그램 평가 결과, 미흡 이하의 사업자에 대해서는 도축(계)장에 대한 각종자금 지원이 제외된다. 또 도축장 운영자금도 HACCP평가등급, 부분육 유통비율 등을 고려 지원 금액이 조정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물도축가공업체지원사업의 지원요건을 이같이 강화키로 하고, 올해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농축산부에 따르면 가금계열화사업자가 방역 프로그램을 미흡하게 이행했을 경우 도축장시설보완, 축산물가공업체시설, 도축장운영자금, 오리도축장운영자금, 축산물가공업체운영자금 지원을 전면 제외키로 했다.

또 거점도축장에는 50억 원 이내, 일반도축장에 10억원 이내로 지원해 주고 있는 도축장 운영자금도 HACCP 평가등급이라든가 자사매취판매비율, 부분육 유통비율 등을 고려 지원 금액을 조정키로 했다.

이처럼 지원요건을 강화한 반면 도축장운영자금, 오리도축장운영자금, 축산물가공업체운영자금 등 3개 사업에 대해서는 전년도 운영자금 지원업체의 경우 상환기일 도래 시 해당년도 지원 내에서 대환이 가능하도록 융통성을 부여했다.

또한 계란가공장·집하장 시설, 계란등급시설 설치자 이외 메추리알 가공장, 집하장 설치자에 대해서도 사업지원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한편 지원자금 사용용도도 기존에 계란가공장·집하

장시설, 계란등급시설에다 계란운반 시설 및 차량에까지 확대했다. 앞으로는 가금계열화사업자의 방역 프로그램 평가 결과, 미흡 이하의 사업자에 대해서는 도축(계)장에 대한 각종자금 지원이 제외된다. 또 도축장 운영자금도 HACCP평가등급, 부분육 유통비율 등을 고려 지원 금액이 조정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물도축가공업체지원사업의 지원요건을 이같이 강화키로 하고, 올해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농축산부에 따르면 가금계열화사업자가 방역 프로그램을 미흡하게 이행했을 경우 도축장시설보완, 축산물가공업체시설, 도축장운영자금, 오리도축장운영자금, 축산물가공업체운영자금 지원을 전면 제외키로 했다.

또 거점도축장에는 50억 원 이내, 일반도축장에 10억원 이내로 지원해 주고 있는 도축장 운영자금도 HACCP 평가등급이라든가 자사매취판매비율, 부분육 유통비율 등을 고려 지원 금액을 조정키로 했다.

이처럼 지원요건을 강화한 반면 도축장운영자금, 오리도축장운영자금, 축산물가공업체운영자금 등 3개 사업에 대해서는 전년도 운영자금 지원업체의 경우 상환기일 도래 시 해당년도 지원 내에서 대환이 가능하도록 융통성을 부여했다.

또한 계란가공장·집하장 시설, 계란등급시설 설치자 이외 메추리알 가공장, 집하장 설치자에 대해서도 사업지원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한편 지원자금 사용용도도 기존에 계란가공장·집하장시설, 계란등급시설에다 계란운반 시설 및 차량에까지 확대했다.

▶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2015. 01. 09]

광범위한 예방적 살처분
정책만이 능사인가
보상금만 1,400억 원 넘어
위험 지역 살처분 했어도

지난해 1월 전북 고창의 한 종오리 농장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AI는 여전히 잡히지 못한 채 1년 내내 이어지고 있다.

고병원성 AI는 지난해 1월 16일 고창에서 최초 발생 한 후 7월 25일 이후 추가 발생이 없어 9월 4일 이동제한을 해제 했지만 9월 24일 영암 육용 오리 농장에서 추가로 발생했다.

그 후 전남에서 산발적으로 발생하다, 11월 7일 전북 김제에서 추가로 발생했고, 12월 11일 경남 양산, 12월 13일 전남 나주, 12월 26일에는 경기 성남 모란시장에서도 고병원성 AI가 발생하면서 방역당국을 긴장케 했다.

이번 고병원성 AI는 발생 기간이 360여일로 과거 네 차례의 고병원성 AI 사태와 비교해 가장 길다. 살처분 된 닭과 오리 등 가금류가 1500만 마리에 이르고 살처분 보상금 등 피해액 규모도 1,400억 원을 넘었다.

◆ 우리나라의 살처분 정책과 문제점

우리나라 AI 방역 SOP에는 발생농장 반경 500m 이내 가금류에 대해서만 예방적 살처분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전문가 의견 등을 반영해 예외적으로 3km까지 살처분을 허용하고 있다.

이는 3km 이내 위험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바이러스가 수평전파 될 경우를 사전에 차단하고 예방적 살처분 조치를 통해 AI의 확산을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취해지는 조치다.

실제 현장에서는 반경 3km까지 확대해 적극적인 예방적 살처분을 시행한 경우가 많아 예방적 살처분 규모가 급격하게 늘었다.

지난해 4월 22일 기준, 28개 AI 발생 농장의 살처분 마리수가 53만마리로 총 살처분 마리수인 1276만마리의 4.2%에 불과하며 반경 500m이내 오염지역 살처분 마리수가 12%인 151만마리, 500m~3km 반경의 위험지역 살처분 수량이 1,072만수로 84%를 차지했다.

따라서 당시 예방적 살처분 마리수가 95%에 달했는데도 이후 AI가 지속적으로 확산되자 정부의 살처분 정책이 비과학적인 과잉 대응이라는 비판 여론이 제기됐다.

실제로 지난해 1월 28일 전북 정읍시 영원면 소재 오리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하자 당초 해당 지자체에서 3km 반경 이내의 모든 가금류를 살처분 하기로 했다가 논란 끝에 2월 7일 살처분 범위를 500m 이내로 축소하고 위험지역 3km내 가금류는 이동제한 조치만 내렸다. 그 이후 아무 문제없이 이동제한 기간이 경과해 해당 계군을 출하했다. 이는 반경 3km 농장까지의 살처분이 과잉 대응이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사례로 전해지고 있다.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침출수와 방역작업에 투입된 약품성분들로 인해 토양의 이차적 오염에 대한 피해가 불가피하고, 동물복지 측면에서도 현행의 살처분 정책은 가축에 대한 기본적인 생명 존중 의식이 결여 돼 있다는 지적이다.

◆ 외국의 살처분 정책은?

2014년 4월 13일 6차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일본의 경우 발생농가에 한해서만 24시간 이내에

살처분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살처분 보상비용 최소화는 물론 언론의 노출도 상대적으로 적어 고병원성 AI 발생기간에도 닭고기 소비위축 현상이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일본 역시 고병원성 AI 발생농장 반경 3km 이내 가금류 농장에 대해 이동제한을 실시하고 있지만 이동제한 지역 내에 있는 종계농장에서 산란한 종란에 대해 해당 종계가 고병원성 AI 음성판정이 나올 경우 반출을 허용해 부화용 종란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동안 고병원성 AI가 수차례 발생했던 미국도 AI 방역 SOP 발생농장 계군만 24시간 이내 살처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2마일(3.2km) 반경 내 위험지역 가금류에 대해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위험지역 내 종계에서 생산한 종란의 경우 해당 종계군이 고병원성 AI 음성 판정을 받을 경우 이동해 부화용 종란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서는 고병원성 AI 반경 500m 내에서 선택적 살처분을 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와 관련 대한양계협회 관계자는 “일본, 미국 등 선진국의 AI 방역 SOP를 벤치마킹해 과도한 살처분으로 인한 직·간접적 손실과 사회적 비용을 줄여야 한다”면서 “그래야만 광범위하고 연속적인 살처분 사태로 인한 언론의 보도 역시 줄어들게 됨으로써 과도한 소비위축 현상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개선방안

과잉 살처분이라는 비판 여론이 일자 방역당국도 살처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새롭게 마련된

방역당국의 살처분 개선안은 과학적 분석을 기초로 방역상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방역대를 설정하고, 이동통제와 살처분을 최소화한다는 기조다.

개선안에 따르면 방역대는 현행 500m, 3km, 10km로 일률 설정된 것을 지형 및 역학적 특성 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설정한다. 기본 틀은 유지하되 위험분석 후 지역여건에 따라 조정한다는 것이다.

또한 살처분은 방역대내 일괄 방식에서 선별적 방식을 채택해 추진한다. 현행 500m 또는 3km 예방적 살처분에서 발생농가 살처분을 원칙으로 하되, 방역대내 발생, 신고시기, 축종, 역학관계, 방역실태 등을 고려해 예방적 살처분을 실시한다는 것이다.

또 방역대내 가금 및 알은 현행 전부 이동제한에서 안전성 확인 후 출하가 가능토록 제도를 개선한다.

정부의 이 같은 개선안은 가금 관련 생산자단체와 학계, 환경단체 등에서 지속적으로 건의한 내용을 담은 것이다. 이 개선안은 살처분 두수 감소와, 자원낭비 축소, 국민 공감대 형성이라는 긍정적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개선안이 실행될 경우 AI가 확산될 가능성 우려에 따라 이에 대한 보완으로 사전 준비 체제 강화가 주문되고 있다.

가상방역훈련(CPX) 강화, 초동대응 전문가 풀구성, 종합 관제시스템 구축, ICT 기술 활용을 통한 역학조사의 신속·정확성 제고 등이 그것이다.

이와 함께 살처분 방식 및 사후관리도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살처분은 이산화탄소 등을 활용해 인도적으로 안락사 시킬 수 있도록 사육방

식별 살처분 장비를 지원하고, 동물의 습성에 따라 고통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살처분 방법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이 실시돼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현장에서 직접 방역에 참여하고 있는 방역관 및 일선 양계전문 수의사들은 동절기 일정기간 동안 AI에 감수성이 예민한 오리 및 산란계 농가에게 정기적으로 혈청을 제출하도록 의무화해 양성반응이 나올 경우 해당 계군을 살처분 하는 정책으로 전환하는 것이 보다 과학적이고 효과적인 방역 대책이라고 주문하고 있다.

한 가금 사육농가는 “살처분 보상비는 물론 살처분 작업 공무원 동원 등에 따른 행정력 낭비, 국민적 불편과 축산업에 대한 혐오적 인식 확산 등 무형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AI 발생농장에 대해서만 신속하게 살처분 조치하고, AI 바이러스에 민감한 오리 등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 강화 등 별도의 대책을 수립하는 방향으로 SOP를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축산경제 박정완 기자 [2015. 01. 09]

대한민국 고병원성 AI 상재국 되나

계절 가리지 않고 발병·확산...
'안전 지대'가 없다

◆ 국내 AI 발생현황과 특이점

우리나라에서는 AI가 1996년 3월 18일 경기도 화성의 종계장에서 처음으로 발생했다. 이날 발생한 AI 바이러스는 H9N2의 저병원성(폐사율 20~30%)이었다. 이후 같은 해 5월 18일 전라북도 정읍(폐사율 12%)과 8월 1일 경상북도 영천

(폐사율 23.6%)에서도 저병원성 AI가 발생했고 당시 정부는 해당 5개 농장의 가금류 9만7963마리를 살처분 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더 이상 AI 청정지역이 아니게 됐다.

1995년 중국과의 국교 수립 이후 양국 간 무역·관광의 교류가 본격화된 시기라는 점에서 당시 수의·축산 전문가들의 우려는 컸다.

2001년 이 같은 우려는 현실로 나타났다. 2001년 5월 23일 중국산 수입 오리육(중국 상하이의 Daying Food)에서 고병원성 AI 바이러스가 분리됐고, 정부는 중국산 가금육 수입 금지 및 수입된 가금육을 폐기하는 조치를 취했다. 이와 동시에 국내수입 가금육에 대한 전면적인 검사에 들어갔다.

이 사태로 인해 가금육의 국제 교역이 바이러스 전파의 주요 경로라는 점이 부각됐다. 실제로 수입가금육에서는 ND(뉴캐슬병)나 저병원성 AI 등 다양한 가금 질병의 바이러스가 분리되기도 했다.

2003년에는 국내에서 첫 번째 고병원성 AI(H5N1)가 발생했다. 2003년 12월 10일부터 2004년 3월 20일까지 총 19건(닭 10건, 오리 9건)의 고병원성 AI가 발생했고, 392농가의 가금류 528만 마리가 살처분 됐다. 여기에 투입된 비용도 1,500억 원에 이른다. 당시 국내 유입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역학조사 결과 오리 농장이 수평전파의 주요인으로 지목됐다. 2006년 11월 22일부터 2007년 6월 18일까지는 총 7번의 고병원성 AI(H5N1)가 발생해 460개 농장의 280만 마리의 가금류가 살처분 됐다.

이 시기 농장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AI 바이러스는 야생철새로부터 분리된 바이러스와 동일함으로써 야생조류를 통해 바이러스가 농장에 유입됐

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렸다.

특히 처음 신고 시 이미 5개 농장이 감염돼 있었다는 점(최초 신고 농장과 처음 발생 농장이 다름)에서 전국적인 감시망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2008년에는 이례적으로 겨울이 아닌 봄에 고병원성 AI가 발생했고, 전국적으로 유행하는데 단 42일이 소요됐다는 점에서 방역당국을 긴장시켰다. 전국 11개 시도에서 846만 마리가 살처분 되는 등 역대 최대 살처분 마리수를 기록했다.

당시 서울을 포함한 주요 도시에서도 발생함으로써 인근 재래시장 방역의 중요성이 부각됐다.

2010년 12월 29일 발생한 고병원성 AI는 다음해 5월 16일까지 이어져 종식에 139일이 소요됐으며 286농가에서 647만 마리가 살처분 됐다. 검사 결과 4건의 야생조류와 1건의 분변에서 고병원성 AI 바이러스가 분리돼 철새에 의해 바이러스가 유입됐을 것으로 추정됐다.

2014년에는 이전과는 달리 두 종류의 H5N8형(고창주, 부안주)의 고병원성 AI가 1월 16일 최초로 발생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현재까지 살처분 마리수는 2008년을 넘어선 1,500만 마리에 육박하고 있다. 살처분 보상금 또한 1,251억 원이 지급됐지만 생계안정자금 등 추가로 들어갈 비용을 고려하면 살처분 비용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이번 고병원성 AI는 계절을 가리지 않고 발생했다는 점에서 고병원성 AI 상재화에 대비해야 한다는 교훈을 남겼다.

◆ 고병원성 AI 백신, 접종 왜 안하나

사상 최악의 고병원성 AI 사태가 발생하자 백신 사용을 두고 찬반 논란이 적지 않다. 방역당국은 지금까지 백신사용 없이 청정화를 실현한다는 방역정책 기조를 유지해 왔다. 그러나 무분별한 살

처분에 대한 지적이 끊이지 않자 최근 고병원성 AI 백신 도입을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병원성 AI 백신 접종을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무분별한 살처분이 아닌 백신 접종을 통해 질병으로부터 동물을 보호하고 바이러스 확산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초동방역이 실패해 고병원성 AI가 전국적으로 확산 또는 만연되거나 방역체계가 허술해 살처분 정책만으로 확산을 막을 수 없을 경우와 홍콩과 같이 지속적으로 특정지역에 고병원성 AI가 전파되는 경우에 백신 접종과 살처분 정책을 병행해 실시하는 것이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주장은 위험한 발상이라고 수의 전문가들은 말한다. AI 바이러스는 크게 A, B, C형으로 3종으로 분류된다. 이 중 B형과 C형은 사람에게 감염되고, A형 바이러스는 사람을 비롯해 닭, 칠면조, 오리, 돼지, 말, 밍크, 물개 등 다양한 종류의 척추동물에 감염된다.

A형 AI 바이러스는 다양한 아형(subtype)이 있는데 바이러스 표면에 혈구응집소의 특성에 따라 H1부터 H16까지 16종이 있으며, '뉴라미니다제'라는 효소가 나타내는 표면 단백질의 특성에 따라 N1부터 N9까지 9종의 아형으로 구분된다. 따라서 H형과 N형을 조합할 경우 A형 AI바이러스는 이론적으로 총144종(16×9)의 아형이 존재하게 된다.

특히 AI바이러스 유전자는 다른 바이러스와 달리 한선으로 연결된 것이 아니라 별개의 유전자 분절 8개로 구성돼 있고, 두 종류의 AI바이러스가 한 개체에 동시 감염되면 8개의 유전자끼리 섞여 재편성이 일어나면 이론적으로 256종의 유전자 배열이 서로 다른 AI 바이러스가 출현(변이)

할 수 있다.

이처럼 고병원성 AI바이러스는 혈청형이 많고 변이가 심해 현재나 기존에 유행했던 유형의 바이러스 타입의 백신을 개발한다 해도 백신 효과를 장담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 2008년 막대한 피해를 입혔던 H5N1형 타입의 백신을 개발해 접종했다 해도 2014년에는 H5N8형 AI가 발생했기 때문에 백신의 효과가 없다. 이처럼 미래에 어떤 형의 바이러스가 출현할지도 모르는 상황이라 이를 염두에 두고 수십 종류 혈청형의 백신 개발에 나서기가 말처럼 쉽지가 않다는 것이다.

또한 경제성 측면에서도 현행 살처분 보다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전반적인 의견이다.

양계산업 관계자들도 백신 접종은 가금류 수출에 큰 타격을 입힐 수 있기 때문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충북대학교 모인필 수의과대학 교수는 “고병원성 AI 백신은 달콤한 사탕이지만 독이 될 수 있다”면서 “이상적인 백신이 개발돼도 계군의 5% 가량은 항체형성이 불충분하고, 지속적인 바이러스의 전파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수의전문가도 “고병원성 AI 백신을 도입하기 전 WHO, OIE 등에서 요구하는 차단방역시스템을 충분히 구축해야 한다”면서 “현재로서 고병원성 AI 백신 접종은 능사가 아니다”고 전했다.

이 같은 이유로 고병원성 AI 백신은 전세계적으로 상용화돼 공식 또는 비공식적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도입을 꺼려하고 있다.

◆ 고병원성 AI 전용 소독제, 효과 있다

현재 국내에서 품목허가 된 가축방역용 소독제

중 AI 바이러스에 대한 소독제 효력시험을 거친 소독제는 193종으로 성분별로 크게 염기제제, 산성제제, 계면활성제, 산화제제(염소계, 산소계), 알데히드로 분류된다.

방역당국은 효력시험을 거친 소독제가 고병원성 AI 바이러스 사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를 선택해 사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들 소독제 중 일부 제제들의 효과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익명의 한 업계 관계자는 “고병원성 AI 방역에 사용되고 있는 소독제 중 많은 제품이 고병원성이 아닌 저병원성 바이러스로 실험돼 허가가 나기 때문에 고병원성 AI 바이러스 사멸 효과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수의전문가)는 “AI 바이러스에 효력을 인증 받은 소독제들 중에는 구연산과 능금산 성분이 들어간 제품이 있는데 이들 성분은 FMD에는 효과가 있지만 AI에는 효과가 떨어지고 소독 잔류 효과도 낮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방역전문가들은 고병원성 바이러스에 맞춘 효력 실험이 필요하고, 변이가 심한 바이러스의 특성상 효력 재평가를 주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제품 성분별로 사용법과 희석배수가 다르기 때문에 성분과 용법, 용량을 잘 파악한 후 사용해야 하며, 무엇보다도 정기적으로 살균 소독을 실시할 것을 강조했다.

이외에도 소독제 생산업체들이 카피제품 생산을 지양하고, 현재 소독제로 사용하고 있는 주요 성분 외에 안전하면서도 강력한 효력을 발휘하는 소독물질 개발도 다양하게 진행돼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 농가와 정부의 의식 전환 필요

고병원성 AI가 발생 시 확산을 최소화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신속한 신고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양계농가의 신고 의식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 최근 열린 AI 관련 한 공청회에서 모인필 충북대 수의과대학 교수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특히 올해 가끔 농장에서 신고를 꺼려하는 경향이 짙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 교수의 자료에 따르면 고병원성 AI가 처음 발생했던 2003년은 발생 26건 중 농장주가 신고한 경우가 19건으로 신고율이 73.07%, 2006년에는 12건 중 7건으로 58.33%, 2008년에는 106건 중 33건으로 31.13%, 2010년에는 91건 중 53건으로 58.24%를 기록했다.

그러나 이번(2013년 11월 말 기준)의 경우 고병원성 AI 양성 판정이 내려진 295건 중 신고를 통해 밝혀진 경우는 13.22%인 39건에 불과했다.

이 결과를 두고 한편에서는 이전에 유행한 H5N1형은 감염 시 임상증상이 빠른 반면 올해 유행한 H5N8형은 증상이 서서히 나타나 초기 신고가 늦을 수밖에 없다는 반론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모 교수는 이보다 농장주가 여러 이유로 발생신고를 꺼려한 것으로 추정했다. 여러 이유가 있지만 그 중 하나는 살처분 보상금 지급 시 농가의 과실 정도에 따라 보상금이 차등지급 되기 때문에 신고를 꺼리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설명이다. 또한 신고 시 바로 이동제한 조치가 내려지다보니 신고를 망설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농장에서 신고가 늦어지고, 발생신고 후 조치가 취해지다 보니 신속한 조기 대처 및 차단방역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농가의 신고 의식을 높이기 위한 AI 신고포상제 도입이 시급히 추진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폐사계 처리 문제와 관련해서도 농가들의 의식 전환은 필요하다. 다수의 양계농가들에 따르면 폐사계가 발생하면 편의상 개 사육 농가에 위탁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

이럴 경우 폐사계가 원인 모를 바이러스를 안은 채 여러 곳을 떠돌다 개 사육 농가로 들어가기 때문에 질병 전파의 요인이 될 수 있는 우려가 크다.

실제로 올해 상반기 충남 천안과 부여에서 AI 양성농장의 죽은 닭을 먹인 개에서 H5 항체 양성이 확인된 바 있다.

이 같은 행위는 위법일 뿐만 아니라 방역·위생상 위험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에 수의축산 전문가들은 양계농가들이 지양해야 한다고 말한다.

아울러 현재 정부 주도의 방역정책은 발생신고 후 조치, 발생 후 역학 조사, 차단방역 미흡, 방역 행정 전문가 부재, 중요 결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등의 다양한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민간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민간주도 방역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주문도 일고 있다.

또한 고병원성 AI 바이러스의 지속적인 변이 발생에 대응하고, AI가 국민보건과 관련돼 상시 문제화되고 있는 것을 감안, 효율적 대처를 위해 AI 전문국가기구(상시통제 전문조직)의 설립도 추진도 요구되고 있다.

또 정부에서 구성한 역학조사위원들이 탁상공론에 빠져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만큼 지역 축산 현장을 꿰뚫고 있는 현장 수의사들의 역학조사위원 위촉도 검토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수의전문가들은 특히 국내에서의 AI 발생이 한·중 교류가 본격화된 이후부터 시작됐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AI 이외

에도 ND나 QX타입 IB의 국내 발생도 중국에서 유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양돈에서의 PED나 FMD도 마찬가지다. 때문에 국내 수의전문가들은 중국을 '가축질병의 판도라 상자'로 우려하고 있다.

이와 관련 업계 한 관계자는 “올해 중국과의 FTA 체결에서 축산 주요 품목은 대부분 양허에서 제외됐지만 번식용 가축이나, 돼지비계 등의 일부 축산 품목은 개방됐다”면서 “정부의 단일한 협상으로 판도라의 상자가 언제 다시 활짝 열려 버릴지 모를 위험성을 안게 됐다. 어떤 일이 있어도 정부는 중국과의 FTA 협상에서 축산분야의 개방은 막았어야 했다. 특히 앞으로 축산분야의 품목 확대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 축산경제 박정완 기자 [2015. 01. 09]

할랄 뜻, 할랄 음식 돼지고기는 금물 ... 오리고기는?

할랄 뜻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할랄(Halal)'은 '허락된 것'을 의미하는 아랍어로, 이슬람교도가 율법에 따라 먹거나 쓸 수 있는 제품을 일컫는다. 식재료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 많지만 동물성 성분을 배제한 화장품, 생물체의 무늬가 들어가지 않은 의류 등에도 할랄 표시가 들어갈 수 있다.

최근 국내 식음료 업계는 할랄 식품 수출 준비에 한창이다. 하지만 할랄 음식으로 인증을 받는 기준은 무척 까다롭다. 알코올·돼지고기·피가 조금이라도 들어가면 할랄 인증을 받을 수 없다. 반

면 과일·채소·곡류 등 식물성 음식은 인증을 받는 데 큰 어려움이 없다. 할랄 뜻은 종교적인 이유와 건강을 모두 고려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식물성 음식이 동물성 음식보다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이유는 '지방의 차이'에 있다. 대개 식물성 음식은 불포화 지방, 동물성 음식은 포화지방이 많다고 알려졌다. 포화지방은 우리 몸에 해로운 저밀도 콜레스테롤을 포함해 비만과 뇌졸중, 급성심근경색 등의 질병을 유발한다. 반면 불포화지방은 몸에 좋은 고밀도 콜레스테롤(HDL)을 많이 포함해 심혈관계 질병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할랄 음식에서 동물성 음식이 모두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돼지고기를 제외한 오리고기, 닭고기, 달걀 등은 할랄으로 허용되는 음식이다. 동물 단백질은 식물성 식품에 부족한 아연, 철분 등의 영양소를 보충해 적당량 섭취하면 균형 있는 식단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동물 단백질은 몸의 면역력을 높이고 근육·뼈를 강화하는 기능도 갖고 있다.

▶ 헬스조선 [2015. 01. 14]

슈퍼맨이 돌아왔다 삼둥이, 이번엔 오리고기 먹방

슈퍼맨이 돌아왔다 삼둥이 먹방이 화제다. 1월 18일 오후 KBS2 예능프로그램 '해피선데이-슈퍼맨이 돌아왔다'(이하 '슈퍼맨이 돌아왔다')에서 삼둥이(대한, 민국, 만세)가 아빠 송일국과 함께 스키장을 방문했다. 이날 스키를 배운 아이들과



송일국은 맛있는 오리고기를 먹기 위해 식당을 찾았다. 역시나 먹방의 시작이었다. 아이들은 음식이 나오기 전부터 주인아주머니에게 “이모님, 맘마 주세요”라면서 오늘의 메뉴를 묻는 등 열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이후 오리고기가 나오자 대한, 민국, 만세는 기다렸다는 듯 큼지막한 고기를 한 입에 넣고 먹는가 하면, 곤드레밥으로 주먹밥을 만들어 먹는 폭풍 식성을 자랑했다.

▶ MBN [2015. 01. 19]

닭·오리 AI 차단 ‘일시 이동 중지’ 발동

조류인플루엔자(AI) 재확산을 막기 위해 1월 17일 오전 6시부터 18일 오후 6시까지 36시간 동안 전국의 닭·오리 등 가금류와 관련 종사자·차량에 대해 일시 이동중지 명령이 발동 됐다.

최근 AI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축산 시설과 차량 등을 일제 소독해 전국적인 확산 기류를 조기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이동중지대상자는 임상수의사, 중개상, 가축분뇨 기사, 농장관리자, 가축운송기사 등 가금류 차량운전자와 축산업 종사자 10만6,000여 명이고 이동중지대상 시설은 닭·오리 등 가금류 사육농장과 도축장, 사료공장 등 3만1,000여 곳이다.

이동중지 명령이 내려지면 가금류 농장에서는 소유 차량과 농장을 소독해야 하고 전통시장 가금판매업 종사자는 판매점의 가금류를 모두 비우고 일제 세척·소독해야 한다.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같은 기간 구제역 차량에 대해서도 일시이동제한 조치를 취하고 일제소독에 들어갔다. 농식품부는 “AI 발생지역의 가금사육농장이나 철새도래지 방문을 자제하고 독일, 미국, 중국 등 해외 AI 발생지역을 여행할 때 가금농장을 방문을 삼가 달라”고 당부했다.

▶ 이투데이 김미영 기자 [2015. 01. 18]

호주산 닭, 오리 등 2월부터 수입 재개

2월부터 호주산 닭·오리 등 가금류와 타조류, 가금육 수입이 재개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1월 20일 “호주 내에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의 추가적 발생이 없고 바이러스 감염이나 순환이 없음이 확인됨에 따라 호주를 가금류, 타조류, 가금제품 수입 허용국가로 변경한다”고 말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호주에서는 2012년 11월 가금류에서 AI가 발생해 수입금지조치가 내려졌다. 2013년 10월에도 AI가 재발했던 호주 정부는 국제수역사무국(OIE) 규정에 따라 지난해 2월 AI가 통제가능한 상황이라고 판단, 자체적으로 청정국 선언을 했고 우리나라에도 수입 재개를 요청했다. 농식품부는 2월 초까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별다른 이의가 없을 경우 바로 수입을 재개할 계획이다. 한국농수산물공사(aT)에 따르면 국내 수입되는 호주산 가금류·가금육의 경우 2011년 기준 칠면조 고기 5t, 기타 가금육 5t 등으로 양이 많지는 않다.

▶ 국민일보 조민영 기자 [2015. 01. 20]

닭·오리를 농가에 위탁해 키우는 계열화 사업자 명단까지 모두 공개된다. 하림 계열 농장의 구제역, 다항오리와 사조해표 농장 AI 발생 식이다. 계열화 농가에서 구제역과 AI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지만 정작 사업자 명단은 공개대상에서 빠지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월 20일 ‘계열화사업자책임관리제’를 AI에 이어 구제역까지 확대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고병원성 AI 212건 중 계열화 농가가 162건, 76.0%나 됐고 구제역도 지난해 12월 이후 이제까지 발생한 61건 중 계열화 농가가 30건, 49.2%나 차지했다. 올 들어서도 현재까지 하림그룹 계열사인 선진과 사조해표 등에서 구제역이, 다항오리와 사조해표 등에서 AI가 발생했지만 일선 농가의 명단만 공개됐다.

농식품부는 계열화 사업자를 대상으로 방역책임 의무를 부여하고 구제역 등 가축질병이 발생했을 때 관리책임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 제재도 강화할 방침이다.

2013년 기준 계열화 비율은 육계는 92.7%, 오리는 94.2%, 돼지는 14.3%로 추산된다.

▶ 뉴데일리경제 권대희 기자 [2015. 01. 20]

위탁농장 가축질병 발생하면
사업자 명단도 공개
농식품부, ‘계열화 사업자 책임관리제’ 추진

앞으로는 AI와 구제역이 발생할 경우 돼지와

가축사육제한구역 거리 재설정 연구결과 ‘파문’

정부의 가축사육제한구역 거리 재설정 연구가 최종 마무리 됐다. 그러나 당초 축산업계의 기대와는 달리 불합리한 기준이나 관행은 언급되지 않

표 1 연구용역 결과

| 구분 | | 제한 거리 | 기존 권고안 |
|------|----------|--------|--------|
| 한육우 | 400마리 미만 | 50m | 100m |
| | 400마리 이상 | 70m | |
| 젓소 | 400마리 미만 | 75m | 250m |
| | 400마리 이상 | 110m | |
| 돼지 | 1천 마리 미만 | 400m | 500m |
| | 1천~3천 마리 | 700m | |
| | 3천 마리 이상 | 1,000m | |
| 닭·오리 | 2만 마리 미만 | 250m | 500m |
| | 2만~6만 마리 | 450m | |
| | 6만 마리 이상 | 650m | |

은 채 오로지 제한거리에만 초점이 맞춰진데다 그나마 납득키 어려운 산출방법으로 일부 축종의 경우 기존 환경부 권고안 보다 더 확대되면서 파문이 예상되고 있다.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한국환경공단'과 '아태행정산업 연구원'에 의뢰, 지난해 6월부터 가축사육 제한구역 거리 재설정 연구에 착수한 결과 각 축종별 규모에 따른 사육 최소 제한거리로 △한육우는 50~70m △젓소 75~110m △돼지 400~1,000m △닭·오리 250~650m가 제안됐다.

기존 환경부의 권고안과 비교해 한육우(기존 100m)와 젓소(250m)의 경우 사육규모에 관계없이 감소한 것이다. 돼지(500m)의 경우 전업 규모 미만까지는 소폭 감소한 반면 그 이상 규모의 거리제한은 최대 2배 늘어났으며 닭과 오리

(500m)도 비슷한 결과가 나오게 됐다.

이번 연구를 담당한 두 개 기관은 또 지자체장으로 하여금 권고안 기준 반영 시 악취저감 노력이 이뤄지고 있거나 계획 중인 시설에 대해서는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되 축산단지화 및 밀집사육 등으로 인해 민원 발생소지가 높다고 판단될 경우 강화된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권고안에 삽입해야 할 것으로 분석했다.

축산업계는 이러한 연구결과에 대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서 환경부 주도하에 연구가 이뤄져온 만큼 객관성을 상실한데다 사전에 결과를 정해놓은 '껴맞추기식 연구'로 각 축종간 분열을 조장, 이번 연구결과를 토대로 축산규제를 강화하려는 의도가 고스란히 드러났다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축산단체의 한 관계자는 "연구가 시작될 때만 해도 가축사육 거리제한에 대한 지방조례의 문제점이 해소될 근거가 마련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었다"고 털어놓으며 "하지만 그간 연구과정이나 결과를 보면서 큰 착각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 오히려 일선 지자체의 '축산 퇴출' 추세를 공고히 해주는 근거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도 긴급회의를 통해 이번 연구결과에 대해 문제점을 제기하고 나서는 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2015. 01. 21]

살처분 현장 여과 없는 보도에
업계 반발
방역 현장 매뉴얼
지켜지지 않아 질병 확산 우려

AI발생으로 인해 발생농장의 살처분 현장이 여과 없이 보도되고 있어 오리업계가 자칫 소비위축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방역 현장에서 살처분 매뉴얼이 지켜지지 않고 있어 오히려 질병 확산의 원인이 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모습이다.

지난 1월 15일 한 언론매체가 경기 안성의 한 오리농장 살처분 현장 사진을 보도했다. 사진에는 방역요원 1명이 봉둥이를 들고 서 있고 나머지 2명은 피범벅이 된 오리를 운반하고 있는 모습을 담고 있다. 그 중 한명은 마스크도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을 하고 있었다.

이를 두고 오리업계는 가뜰이나 AI로 인해 오리고기 소비가 급감해 고사 직전에 있는데 이 같은 방역 현상이 여과 없이 보도되면 오리고기 소비를 더욱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CO₂를 사용해 질식사 시킨 후 매물처리해야 하는 살처분 매뉴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역현장에서 이 같은 매뉴얼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오염된 혈액으로 자칫 질병 확산의 요인이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 축산신문 이희영 기자 [2015. 01. 16]

AI·구제역에 지난해
육류 수출 줄었다 ... 오리 89%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와 구제역이 연중 발생하며 지난해 닭과 오리, 돼지 등 신선육 수출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에서 AI와 구제역이 아직도 근절되지 않아 올해는 신선육 수출이 더 큰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표 1 육류수출 현황

| 종류 | 2013 | 2014 | 전년대비 (%) |
|----------|--------------|--------------|----------|
| | 수출 물량(kg) | 수출 물량(kg) | |
| 닭고기-총계 | 26,104,142.2 | 19,163,897.5 | -26.18 |
| 닭고기-신선계 | 24,301,614.5 | 7,445,598.2 | -28.21 |
| 닭고기-가공계 | 1,802,527.7 | 1,718,299.3 | -4.67 |
| 오리고기* | 6,674,825 | 751,788 | -88.74 |
| 돼지고기-총계 | 1,924,073.9 | 1,928,567.6 | 0.23 |
| 돼지고기-신선계 | 1,298,864.7 | 836,724.6 | -35.58 |
| 돼지고기-가공계 | 625,209.2 | 1,091,843.0 | 74.64 |

자료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 *오리 가공육 수출 거의 없음.

1월 28일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 등에 따르면 지난해 오리 신선육의 수출물량은 751.8t으로 전년의 6천674.8t보다 88.7%나 급감했다. 이는 오리 사육 농가에서 AI가 집중적으로 발생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지난

해에는 오리 가공육 수출도 거의 없었다. 또 지난해 닭의 신선육 수출 물량은 1만7천445.6t으로 전년의 2만4천301.6t보다 28.2% 감소했다. 가공육 수출물량도 4.7% 줄어 신선육과 가공육을 합친 물량은 26.2%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돼지 신선육 수출물량 감소폭은 전년대비 35.6%로 닭보다 더 컸다. 하지만 돼지고기는 가공육 수출이 74.6% 급증한 데 힘입어 닭과 오리와 달리 가공육과 신선육을 합한 전체 수출물량은 0.23% 늘었다.

하지만 지난해 발생한 AI와 구제역이 해를 넘기고도 산발적으로 계속 발생하고 있어 오리와 닭, 돼지고기 수출길은 올해 더 험난할 것으로 관측된다.

농식품부는 삼계탕 등 질병과 관계없는 열처리가 금육의 수출을 활성화할 방침이지만 AI 발생이 진정되지 않는 한 이마저도 좋은 성적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돼지고기도 유일한 수출 시장인 홍콩마저도 구제역 발생지역 제품은 방역조치를 완료한 날로부터 1년 이후에나 수출 재개가 가능하다. 현재 홍콩으로 돼지고기를 공급할 수 있는 지역은 제주도와 강원도, 전라도이며, 수출물량이 한정돼 있다. AI와 구제역이 조기에 종식되지 않으면 그동안 육류수출 확대를 위해 공을 들여온 러시아·필리핀·베트남·일본·대만 등지로의 수출재개와 신규수출도 올해는 물 건너갈 가능성이 높다.

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2014. 01. 28]

